

일일 국제 기후·에너지 동향

기후·에너지 정책

◆ 캐나다 BC주, 탄소세 2025.4월부터 인상(주밴쿠버총영사관)

- 캐나다 현지 언론 보도(3.4)에 따르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탄소세(현재 톤당 80 캐불)는 2025.4월부터 톤당 15캐불 인상되어 톤당 95캐불이 될 예정이며, 금번 탄소세 인상은 캐나다 연방정부의 탄소세 기준*과도 부합함.

* 캐 연방정부는 2016.10월 「탄소 오염 가격 책정에 대한 범캐나다 접근 정책(Pan-Canadian Approach to Pricing Carbon Pollution)」을 발표하여 주·준주정부가 자체적으로 2018년까지 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를 도입하도록 하고, 만약 주·준주정부가 자체적 탄소 가격제를 마련하지 않거나 연방 탄소 가격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직접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federal backstop을 도입함.

- BC주 정부는 주 자체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번 탄소세 인상은 연방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

※ BC주는 2008.7월 북미에서 최초로 탄소세를 적용한 주로, 2008년 톤당 10캐불의 탄소세를 부과했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왔으며, 탄소세의 상당 부분은 기후 행동 세액 공제(Climate Action Tax Credit)를 통해 주민들(특히 저소득층)에게 환급되고 있음.

- 아울러, BC주 탄소세는 2028년에는 톤당 125캐불, 2030년에는 톤당 170캐불로 인상될 예정

- 한편, Pierre Polievre 캐 연방 보수당 대표, Mark Carney 캐 연방 총리 지명자 등 다수의 연방 정치인들이 연방 탄소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특히, David Eby BC주 수상은 2024년 만약 캐 연방정부가 federal backstop 정책을 폐지한다면 BC주 역시 탄소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신재생에너지

◆ 덴마크-독일, 연결 수소운송관 건설 프로젝트 지원 관련 합의 도출(주덴마크대사관)

- 덴마크 기후·에너지·유틸리티부는 2.6(목) 의회에서 주요 정당들이 덴마크와 독일을 연결하는 수소 운송관 건설 프로젝트에 총 157억 DKK(약 21.7억 USD) 규모의 정부 재원을 대출과 건설 지원금 형태로 지원키로 하고, 정부 지원 조건을 완화하는 데 합의를 도출하였다고 발표함.

* 덴마크 국영 에너지 회사 Energinet社가 건설·운영 예정인 360km 길이의 프로젝트로 덴마크 Lille Torup에 위치한 수소 저장시설로부터 덴마크 주요 송전망 도시와 독일 국경 지역 등을 하나로 연결

- 동 합의를 통해 할당된 재원은 계획된 전체 수소운송관 중 독일 국경과 연결되는 일부 부분(Esbjerg, Egtved, Syvtal 지역 연결) 건설을 위해 활용될 예정

- 동 프로젝트의 운영사인 덴마크 국영 에너지 회사 Energinet社는 2030년부터 동 수송관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끝.